

## ‘nunca más’와 ‘침묵협정’ 사이: 심판대에 선 아르헨티나 군부의 ‘더러운 전쟁’\*

박구병(서울대 미국학연구소)\*\*

- I. 들어가는 말
- II. 군부의 정치 개입과 ‘더러운 전쟁’(1976-1983)
- III. 『nunca más』(*Nunca Más*):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  
(CONADEP)의 활동
- IV. 사법적 심판에 대한 가해자의 반발과 정치적 타협
- V. 침묵과 망각의 협정에서 다시 심판으로
- VI. 맺는 말

먼저 우리는 모든 불순분자들을 처리할 것이다. 다음에는 그들에 협조한 자들을, 그 다음엔 심정적 동조자들을, 그 다음엔 무관심한 자들, 마지막으로 겁먹은 자들을 처리할 것이다(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 생장(Ibérico Saint-Jean) 장군, 1976년 5월) (Fisher 1989, 104).

납치된 순간부터 희생자들은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 두절된 채 비밀장소에 갇히고, 지옥과 같이 끔찍한 체형을 당한 것이다. 앞으로의 운명도 모른 채 양쪽 발이 시멘트로 굳혀져 강이나 바다에 던져지거나 한줌의 재로 변해 갔다(Informe de la CONADEP 1984, 10; 송기도 1988, 16).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2-072-AL2010).

\*\* Koo-Byoung Park(Seoul National University, American Studies Institute, zapata@freechal.com),  
“Between *Nunca Más* and Pact of Silence: Argentina’s ‘Dirty War’ on Trial”.

## I. 들어가는 말

1976년 3월 24일의 군부쿠데타 세력은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통치를 펼쳤다. 1983년까지 지속된 이들의 ‘국가 재건 과정’(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은 당시까지 권위주의적 군부 통치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1966-1973년의 “아르헨티나 혁명”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호르헤 비델라(Jorge Rafael Videla) 장군을 필두로 한 군사통치위원회(Junta Militar)는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때로는 극우 무장단체를 활용해 노동자들과 청년층에 대해 조직적인 탄압을 가했다. 군부는 이 과정을 정치적 혼란과 반복적인 경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선전했지만, 반대자들에게 ‘국가 재건 과정’은 사실상 “국가 전복 세력”의 위협을 과장해 대중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던 국가 해체 과정이자 ‘더러운 전쟁’(guerra sucia)에 지나지 않았다. 1976년 3월의 쿠데타 세력은 이전 군부정권처럼 헌법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민주주의적 제도를 심각하게 재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에 맞선 혁명”을 이루었다(Romero 2002, 234). 실종자 가족들의 모임인 <오월광장 어머니회>(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에 따르면 ‘더러운 전쟁’ 동안 실종자 수는 줄잡아 30,000명에 이르렀다(Marchak 1999, 3).

이 ‘더러운 전쟁’의 유산(遺産)은 말비나스(포클랜드)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통치위원회가 해체되고 1983년 12월 라울 알폰신(Raúl Alfonsín)이 이끄는 민선정부가 들어선 뒤 공식적인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국가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이어 진행된 사법적 심판은 일부 군 장교들의 반발과 정부 방침의 일관성 부재, 경제 사정의 악화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었다. 납치와 학살의 책임자들은 1986년과 1987년 “기소종결(Punto Final)법”과 “강요에 따른 복종(Obediencia Debida)법”이라는 일종의 특사(特赦)법(leyes de perdón)을 통해 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났고, 경제 위기 속에서 알폰신 대통령은 1989년 6월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두고 퇴진했다. 후임 카를로스 메넴(Carlos Saúl Menem)

대통령은 1989년 10월과 1991년 1월 두 차례의 사면을 통해 ‘더러운 전쟁’ 관련자들을 전원 석방시켰다.

그럼에도 정치적 타협 속에서 치유되지 못한 ‘더러운 전쟁’의 상흔, 특히 실종자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을 야기했다. 예컨대 <오월광장 어머니회>는 정치권의 타협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식적인 청산 작업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회 전반에 형성된 ‘망각과 침묵의 카르텔’에 합류하길 거부한 이들은 중단 없는 진실규명 투쟁을 전개하면서 세계적인 인권·평화 단체로 부상하기도 했다. 십 수년 동안 일부에 국한된 진상규명의 요구는 2003년 5월 네스토르 키르츠네르(Néstor Carlos Kirchner) 대통령의 집권 이후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키르츠네르는 과거사 규명 작업을 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군부에 대한 처벌면제를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활동을 독려했고, 2003년 8월 아르헨티나 의회가 알폰신과 메넴 정부의 사면법이나 사면령의 폐기를 천명함으로써 ‘더러운 전쟁’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심판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는 민선정부가 주도한 공식적인 청산 과정, 즉 정치적, 사법적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아르헨티나의 과거규명 작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70년대 초반의 혼란상과 1976년 3월 군부쿠데타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군부가 퇴장한 뒤 ‘더러운 전쟁’이 양산한 인권탄압 행위와 군부통치의 상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다시 거세어지고 있는 과거사 규명 시도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과거청산 과정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어떤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는지, 또는 어떤 한계를 드러냈는지 고찰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 II. 군부의 정치 개입과 ‘더러운 전쟁’(1976-1983)

18년 동안의 망명 끝에 1973년 아르헨티나 “노동자의 영웅”이자 정국의 혼란을 수습해 줄 “마지막 희망”으로 권좌에 복귀한 후안 페론(Juan Domingo Perón, 1895-1974)의 기대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세대 전에 구축한 페론 체제의 근간은 1974년 7월 그의 사망 이전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아내인 부통령 이사벨 페론이 뒤를 이었으나 경제적 침체는 통제불능이었고 정치 폭력의 수위도 높아졌다. 1975년 7월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항해 전례 없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극우 세력은 ‘더러운 전쟁’ 시기에 악명을 떨치는 <아르헨티나 반공 동맹>(la Alianza Anticomunista Argentina, AAA)<sup>1)</sup>을 결성했고, 페론주의 세력은 분열해 일부 급진파가 몬토네로스(Montoneros)<sup>1)</sup>라는 게릴라 조직을 만들었다. 이에 이사벨 페론 정부는 1975년 10월 “말살 포고령”<sup>2)</sup>을 통해 국가 전복 행위를 엄단할 것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아르헨티나 정치 무대의 단골인 군부의 개입을 예비했다.

1976년 3월 24일 국가 재건의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군부쿠데타 세력은 만성적인 정치적 혼란과 ‘아르헨티나 병’(Gilly 1990, 187-198; 이성형 1992, 95-97)이라고 불리던 반복적인 경제 위기에 대해 나름대로 ‘최종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 식 생활양식을 반대하는 그 누구”라도 국가 전복 행위자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와 비기독교적 생활양식으로부터 아르헨티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 장악은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군사통치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아르헨티나에서는 “모든 헌법적 기구가 소진

1) 몬토네로스는 원래 페론주의자들이 조직한 무장저항 단체로서 납치와 살해 전술 뿐 아니라 국내외 선전, 정치적 모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전개했다. 1977년 9월 이후 체 게바라 식의 정치·군사 전위대와 페론주의자의 대중 조직을 결합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이를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다른 저항 세력과의 연대를 어렵게 만드는 분파주의와 테러행위에 대한 의존 때문에 “좌파의 AAA”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Hodges 1991, 205-217).

2) 자세한 내용은 <역사와 기억> 사이트 [http://past.snu.ac.kr/02\\_document/Argentina/Argentina.html](http://past.snu.ac.kr/02_document/Argentina/Argentina.html) 중 번역 사료 1-3번 참조.

되었고 제도적 틀 내의 교정 가능성이 종식되었으며 정상적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므로 “책임감과 민족정신에 충만한 군부가 신의 도움을 힘입어 완전한 국가 회복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에게 혼란을 안겨주었던 상황을 종식” 시켜야 했다 (Loveman and Davies 1997, 158-159). 그들은 억압적인 국가의 구축을 시사하는 전사(戰士)로서의 정치적 결단과 함께 보수적인 ‘자유 기업’ 담론, 달리 말해 구속 없이 개방된 시장을 지향하는 일종의 ‘시장 과시즘’을 선보였다(Corradi 1983, 66-67).

아르헨티나의 쿠데타 세력은 이웃 나라들의 군부와 마찬가지로 민간인 통치에 대한 불신을 품은 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의회를 해산하고 기존 법령을 폐기했다. 또한 자신들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대중매체를 비롯한 반대 세력을 통제하고, 헌법적 제약을 뛰어넘어 수시로 포고령을 선포했다(Loveman and Davies 1997, 12).<sup>3)</sup> 더욱이 쿠데타 세력은 가톨릭적, 반공주의적 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이들을 살해하거나 실종자(desaparecidos)로 만들어 버렸다. 이 과정에서 군대, 경찰, 정보기관, 그리고 <아르헨티나 반공 동맹>과 같은 무장 조직이 동원되어, 활동가와 그 가족에 대한 납치, 고문, 구타, 암살, 재산강탈, 심지어 영·유아 탈취 및 강제입양이라는 반인륜 범죄행위가 거리낌 없이 자행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군사통치위원회는 내부의 적, 즉 “국가 전복을 꾀하는 불순분자”에 대해 전쟁을 수행하면서 1955년 이후 대여섯 차례에 걸쳐 발생한 선배들의 전례를 간단히 압도해 버렸다. ‘더러운 전쟁’ 동안 아르헨티나에서는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속출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망명을 제외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일한 출구는 그저 침묵하는 것뿐이었다. 일종의 ‘침묵협정’이 맺어진 셈이다(O'Donnell et al. 1986, 250-252; Pedroncini 2001, 102).

군부통치자들은 1982년 4월 또 다시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말비나스(Malvinas) 전쟁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sup>4)</sup> 하지만 ‘외부

3) 군사통치위원회의 언론탄압 일지에 대해선 Graham-Yooll(1984, 118-156) 참조.

의 적' 영국을 상대로 무모하게 벌인 이 전쟁은 아르헨티나에 큰 패배를 안긴 채 개전 75일 만에 종결되었고 1982년 7월 예비역 장군 비요네(Reynaldo Bignone)를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들어섰다. 이때 군부는 정치무대의 퇴장을 앞두고 반인륜적 통치에 대한 면죄부를 구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1983년 4월 “국가 전복 세력에 대한 전쟁”의 논리를 되풀이한 군사통치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이어 9월에는 소위 “국가적 화해와 조정법”이라고 불리는 사면법(Ley de Autoamnistía, 법령 22,924)이 제정되었다. 이는 1973년 5월 25일부터 1982년 6월 17일 사이 “국가 전복 기도”에 대한 진압 중 발생한 수많은 폭력행위를 일괄 사면하도록 규정했다(Roht-Arriaza 1995, 148).<sup>5)</sup> 곧이어 1983년 12월 출범한 라울 알폰신(Raúl Alfonsín)의 민선정부는 불행한 과거의 청산과 경제 안정, 그리고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난제들을 한꺼번에 떠맡게 되었다.

### III. 『눈까 마스크』(*Nunca Más*):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 (CONADEP)의 활동

1978년 12월 급진당(Unión Cívica Radical) 내에서 <혁신과 변화를 위한 운동>을 조직하고 군부의 ‘더러운 전쟁’을 강력하게 비판한 알폰신의 정치적 역정은 군부가 퇴진한 뒤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Saavedra 1984, 9). 알폰신 대통령은 1983년 12월 22일 법령 23,040을

4)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 군은 1833년부터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말비나스(영어식으로는 포클랜드[Falkland])와 헤오르히아스, 그리고 남 샌드위치 섬에 전격적으로 상륙해 얼마 안 되는 영국 왕실 경비대원들을 쉽게 물리쳤다. 이 공격은 영국인들을 경악시켰고 한편으로는 아르헨티나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약 250,000여 군중이 오월광장에 모여들었고 당시 대통령 레오폴도 갈티에리 장군은 마리오 메넨데스 장군을 말비나스의 새로운 통치자로 임명했다(Romero 2002, 242-243). 하지만 “로사리오 작전”(Operación Rosario)이라 명명된 이 전쟁의 패배는 전쟁 발발 전부터 이미 진행된 군사통치위원회의 해체를 가속시켰다(Pion-Berlin 1985, 70-71).

5) 이 법령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여론에 관해서는 미 국무부 문서 State Argentina Declassification Project(1975-1984) 중 “Argentine Reaction to the Amnesty Law”(Sep. 27, 1983), <http://foia.state.gov/documents/Argentina/0000AD34.pdf> 참조.

통해 일종의 ‘망각법’(ley del olvido)으로 인식된 사면법의 폐기를 선포했고(Ageitos 2002, 89), 대통령 직속으로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 CONADEP)<sup>6)</sup>를 설치해 작가 에르네스토 사파토(Ernesto Sábato)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7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위원회는 1984년 초부터 <법과 사회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비(非)정부 인권단체들과 협력해 실종자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수많은 자료를 수집했다. 국가위원회는 마르 델 플라타와 코르도바 등 주요 지방 도시에 지부를 설치했고 증언 청취를 위해 여러 곳을 방문했다. 또 멕시코시티, 카라카스, 뉴욕, 파리, 마드리드 등지의 아르헨티나 영사관에서는 망명자들의 증언이 이루어졌다.

국가위원회는 수용소가 있었다고 알려진 경찰서와 군사시설, 사체를 파묻었다는 비밀 공동묘지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언론매체의 주목을 끌었지만 동시에 군 당국의 불만을 사거나 “엄청난 음모를 자행한 자들로부터 모욕과 협박”을 받았다(Informe de la CONADEP 1984, 10). 1984년 7월초 국가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프로그램 제작했을 때, 그 방영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프로그램이 야기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위원장 사파토와 내무부 장관 안토니오 트로콜리(Antonio Tróccoli)의 모두(冒頭) 및 마무리 발언이 추가되었고, 트로콜리는 군부의 충격적인 탄압을 초래한 “혁명 세력의 폭력행위”에 대해 언급했다(The Americas Watch Committee 1987, 22).

결국 1984년 9월 국가위원회는 약 50,000여 쪽에 달하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곧 단행본으로 편집된 이 보고서에는 “다시는 안 돼”(Nunca Más)라는 선명한 제목이 붙여졌다. 여기에는 대개 15-35세의 실종자 8,960명의 이름과 비밀 수용소 340여 곳의 위치가 수록되었다.<sup>7)</sup> 또한 『눈까 마스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납치

6) 아르헨티나의 국가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진실위원회(21곳)와 각각의 활동 내용, 권한, 보고서 제출 여부에 관해서는 Hayner(2001, 291-322) 참조.

7) 보고서의 결론에서 강조했듯이 이 숫자를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신고 실종자 역시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Informe de la CONADEP 1984,

되었는지, 수감자들에게 어떻게 고문이 자행되었는지, 그리고 육·해·공군과 경찰 관할의 비밀수용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밝혔다. 이로써 1976년 3월 24일 군사쿠데타 이전에 시작된 납치와 실종이 ‘더러운 전쟁’ 동안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탄압 방식으로 자리잡았음을 고발했다.

『눈까 마스』는 정치활동가, 노조관계자, 언론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정부 관리와 징집 군인, 신부, 수녀, 청소년, 임산부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희생자들을 기록했다. 1976년 이후의 실종자 9,000여 명 가운데 86%가 35세 이하의 청년층이었고, 30% 가량이 여성이었으며, 그 중 10%가 임신 중이었다.<sup>8)</sup> 실종자 중 약 30% 가량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었고, 단지 그 일부가 노조활동가였다. 그 외 18% 가량이 화이트칼라 노동자, 21%가 학생, 10.7%가 전문직 종사자, 5.7%가 교사, 5%가 자영업자, 약 3.8%가 주부, 1%가 언론인, 0.3%가 사제나 수녀였으며, 2.5%가 징집 군인이었다. 군부통치자들은 게릴라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을 가진 학생과 교사, 빈민촌에서 교리를 가르친 신부나 목사, 해방신학을 신봉하는 가톨릭 신자,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조지도자, 학생회 임원, 비협조적인 신문 기자, 페론주의자, 평화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마르크스·레닌 주의자”, “기독교와 서구문명의 적”으로 지칭하면서 일소 대상으로 삼았다. 더군다나 납치·실종자 가운데에는 변호사 109명(Informe de la CONADEP 1984, 412)과 지역 상공회의소 의장과 지방 판사까지 포함되었다. 칠레나 브라질의 경우와는 달리 영향력 있는 기업가나 전문직업인, 심지어 군 장교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Osiel 2001, 122). 또 『눈까 마스』는 실종자 가운데 외국여권의 소지자들이 상당

479). 이 보고서의 일부 번역은 송기도(1988) 참조. 생환자의 증언에서 드러난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의 해군기술학교(ESMA)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수용소 분포에 대해선, <역사와 기억> 사이트 [http://past.snu.ac.kr/02\\_document/Argentina/Argentina.html](http://past.snu.ac.kr/02_document/Argentina/Argentina.html) 참조.

8) 카스티요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으나 최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실종자의 자녀 오라시오 코르티(Horacio Corti)의 이야기는 비슷한 운명의 일례에 불과하다. <오월광장 할머니회>에 따르면 그동안 400여 명의 강제입양아 중 80명 정도가 본래 정체를 확인했다. *BBC News* 31 March 2004, <http://news.bbc.co.uk/go/pr/fr/-/1/hi/world/americas/3585031.stm>



수 존재했으며,<sup>9)</sup> 실종사건의 변호사나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테러리스트라고 보기 힘든 임산부와 아이들까지 고문의 대상이 되었음을 밝혔다(Informe de la CONADEP 1984, 10).

한마디로 국가위원회의 보고서는 ‘더러운 전쟁’을 감행한 군사독재의 억압과 국가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고발장이었다. 이 보고서는 ‘더러운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크게 보아 1930년 이후 주기적으로 되풀이된 군부의 정치 개입을 극복하려는 노력이었다. 보고서는 진실과 정의를 통해 “불명예스러운 군대에게 조국과 남미대륙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영웅적으로 싸운 지난날 자랑스러운 군대의 진정한 후예가 되게 할 것”임을 강조했다(Informe de la CONADEP 1984, 11).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판결은 사법부의 고유영역으로서 임시특별위원회에 불과한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의 권한 밖에 놓여 있었다. 민선정부에 권력이 이양되기 전 실종자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 폐기되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국가위원회로선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Roht-Arriaza 1995, 287). 예컨대 남아공의 경우처럼 진실 고백과 사면을 연계시킨다거나 다른 형식을 빌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 잔혹한 탄압의 유형이 어떠한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조사하고 후속 인권재판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차원에 머물렀을 뿐이다. 반면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크게 미진했다.

#### IV. 사법적 심판에 대한 가해자의 반발과 정치적 타협

『눈까 마스크』를 통해 ‘더러운 전쟁’에 대한 심판은 거스를 수 없는

---

9)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웨덴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촉발시켰던 다그마르 아헬린(Dagmar Hagelin)의 납치와 실종을 들 수 있다(Informe de la CONADEP 1984, 389-390).; 이 실종사건에 관한 미 국무부 문서에 대해선 “Mystery of Swedish national's disappearance...”(Mar. 14, 1977), <http://foia.state.gov/documents/Argentina/0000A3AB.pdf>의 다수 참조.

대세가 되었지만 본격적인 사법적 청산을 위해선 몇 가지 장애물이 제거되어야만 했다. 사면법의 폐기 외에도 특히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군사법원에만 부여하고 있던 군형법의 재판관할권과 “(부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오월광장 어머니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더러운 전쟁’의 책임자들을 군사법정이 아닌 민간법정에 세울 것을 요청했다. 1985년 5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 항소법원은 비델라를 비롯한 아홉 명의 군사통치위원회 지도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육군을 대표한 비델라와 함께 삼두체제를 구성했던 해군의 에밀리오 마세라(Emilio Eduardo Massera) 제독에게 종신형, 공군의 오를란도 아고스티(Orlando Ramón Agosti) 장군에게 징역 3년 9개월, 비델라에 이어 대통령직에 올랐던 로베르토 비올라(Roberto Viola) 장군에게 징역 16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네 명은 방면되었다. 대법원이 1986년 12월이 결정을 최종 승인한 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증거를 군사법정에 송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에는 중·하급 장교들이 처벌의 우려 때문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6년 12월 23일 “기소종결법”(법령 23,492)<sup>10)</sup>의 통과에 따라 인권탄압의 책임이 명령계통의 말단에서 실제 고문과 폭력 행위를 주도한 중·하급 장교에게 전가되는 분위기가 감돌자 일부 강경파는 반발했다. 이는 1987년 4월 알도 리코(Aldo Rico) 중령이 주도한 “부활절 쿠데타”를 비롯해 네 차례의 카라핀타다(carapintadas)<sup>11)</sup>의 반란으로 표출되었다. 특전부대 연대장 리코는 연방판사의 소환명령에 불응하면서 반란에 돌입했다. 사흘 만에 막을 내린 이 “부활절 쿠데타”는 ‘위신 작전’(Operación Dignidad)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재판 과정에서 실추된 군의 위신과 명예, 그리고 군에 대한 대중의 존경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Hernández 1989, 41-45). 그

10) 이는 향후 60일 이내에 모든 기소절차를 마무리하라는 일종의 제한규정이었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엔 매우 짧은 기간이었기에 정부의 의도에 대해 여러 인권단체와 피해자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마감시한까지 약 300명의 장교들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군부 역시 불만을 품게 되었다(Barahona de Brito 2001, 123).

11) 이는 반란에 가담한 특전부대 요원들이 ‘얼굴에 위장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들은 참모총장의 교체와 인권재판의 종결, 정부 및 언론의 반(反)군부 캠페인 중단을 요구했다(*Clarín* 18 de abril de 1987, 1).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월병영(Campo de Mayo)을 점거한 리코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군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인정할 순 있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평화”라고 주장했다.

카라핀타다의 첫 번째 도전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군 수뇌부가 교체되었고 1987년 6월 5일 “강요에 따른 복종법”(법령 23,521)이 통과되어 상관의 명령을 수행한 중령 이하 장교 1,100-1,200명 가량이 처벌의 우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기세 좋게 ‘더러운 전쟁’ 연루자들을 비난하고, 쿠데타 기도 직후 “항복을 받으러 직접 오월병영에 가겠다”던 알폰신 대통령은 리코가 이끈 카라핀타다 대원들을 “말비나스의 영웅”이라고 칭하기까지 했다(Payne 2000, 53). 하지만 군부가 여전히 ‘더러운 전쟁’의 명분을 정당화하는 상황 속에서 추진된 알폰신의 대(對) 군부 화해정책은 많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sup>12)</sup>

강경파 리코 중령은 1988년 1월 중순 두 번째 쿠데타를 기도했다. “부활절 쿠데타”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중·하급 장교 87명과 하사관들 241명을 규합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간부의 2%에 불과했으며 닷새 만에 코리엔테스주 몬테 카세로스 기지에서 체포된 리코는 강제전역 당한 뒤 수감되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카라핀타다 반란의 주역은 모하메드 알리 세이넬딘(Mohamed Alí Seineldín) 대령이었다. 세이넬딘은 아랍계 이민 2세대 가톨릭 신자로서 정치적 야심이 큰 장교였는데, 1988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오월병영의 보병학교, 즉 “부활절 쿠데타”의 진원지에서 또 한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다(Sain 1994, 157). 그는 카라핀타다에 대해 중립적인 인물을 참모총장에 임명할 것과 이전 반

12) 인권단체 <평화와 정의를 위한 봉사>를 이끈 공로로 198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건축가 아돌포 에스키벨(Adolfo Esquivel)은 다음과 같이 알폰신을 비판했다. “군부의 압력 앞에서 멈추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다.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처벌면제를 선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활절 주간에 벌어진 군대의 불복종은 그들의 입지를 넓히고 국가 테러리즘을 회복시키려는 군부의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Clarín* 21 de abril de 1987, 10).

란에 연루되어 퇴역하거나 한직으로 밀려난 카라핀타다의 원대복귀를 주장하면서 “강요에 따른 복종법”보다 한층 더 포괄적인 사면조치와 국방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 또한 성과가 적지 않았다. 고위 장교의 인사가 단행되었고, 군인의 급료가 약 42% 인상되었으며 인권재판이 거의 종결되기에 이르렀다(Payne 2000, 54-55).<sup>13)</sup>

그럼에도 세이넬딘은 1990년 12월 3일 마지막이자 가장 폭력적인 카라핀타다 반란을 이끌었다. 표면적으로 반란 가담자들의 복직과 군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거듭 요청했으나, 실상 이는 메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었다. 메넴 정부가 이미 1989년 10월 ‘더러운 전쟁’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카라핀타다 반란에 가담한 장교 277명에게 사면을 내렸기 때문에, 예상외로 장군진급에 실패한 세이넬딘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육군본부에서 일으킨 이 반란은 하급장교 300여 명의 동조를 이끌어 냈을 뿐이다. 더욱이 메넴은 세이넬딘의 두 번째 반란을 “쿠데타”로 규정짓고 신속하게 대처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에 없이 적잖은 사상자(민간인 5명을 포함한 사망자 14명과 부상자 50여 명)가 발생했다. 곧 반란 가담자들은 수감되었고 세이넬딘은 1991년 9월 초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네 차례에 걸친 특전부대의 반란은 탈법적인 권력찬탈을 피하는 고전적인 군부쿠데타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기보다는 인권재판의 지속과 군에 대한 “끊임없는 모멸”에 반발한 것이었고, 마지막 반란을 제외하고는 유혈 충돌을 빚지 않았다. 말하자면 특정사안을 관철시키려는 군부 내 강경파의 시위 농성이었던 셈인데, 더욱이 세이넬딘이 이끈 쿠데타의 경우엔 구체적인 처벌의 위협으로부터 군 전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군 자체의 위상을 높이거나, 특히 카라핀타다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려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것이었다(Norden 1996, 133-134).

인권재판에 대한 군부의 반발이 충분히 예견되었지만, 알폰신 정

13) 군 병력 감축을 비롯한 알폰신 정부의 군 정책에 관해서는 Huser(2002, 53-89) 참조. 특히 알폰신 정부 초기 민-군 관계에 관해서는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Latin America, “Relations Between the Alfonsín Government and the Armed Forces”(Mar. 21, 1984), <http://www.gwu.edu/~nsarchiv/NSAEBB/NSAEBB73/840321dos.pdf> 참조.

부는 미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 정국을 주도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Roht-Arriaza 1995, 288). 대중의 후원에도 불구하고 알폰신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소범위를 확정하지 못한 채, 만만치 않은 군부의 압력에 밀리는 것처럼 보였다. 군부의 반발은 조심스럽게 사회적 안정을 성취하려는 알폰신 정부에게 타격을 입혔으며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알폰신 정부의 과거청산 정책은 사법적 책임규명 단계에서 일부 가해자들의 도전이 표면화되고 경제 사정의 악화, 특히 기록적인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과 맞물려 정권의 존속 자체가 의문시되면서 사실상 중단되었다.

반복적인 정치·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까다로운 과제를 넘겨받았던 알폰신 정부는 1985년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아우스트랄(Austral) 계획을 발표하고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등 안정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노동자들의 반대와 외채 증대, 인플레이션의 만연 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이성형 1992, 117-118; 송기도 2004, 10). 또한 군부 외에 민선정부의 등장 이후 상대적으로 수세적 지위에 머물던 교회와 기업은 ‘중도좌파’ 성향의 알폰신 정부 초기 민주화에 대한 칭송에 동참했지만, 경기 침체가 거듭되면서 점차 정부 정책에 등을 돌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데 한몫했다(Romero 2002, 256). 알폰신이 잔여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퇴진한 뒤 출범한 카를로스 메넴 정부는 1989년 10월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군부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했다. 이 사면은 ‘더러운 전쟁’에 연루된 갈티에리와 비요네, 카라핀타다 반란의 주역 리코와 세이넬딘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몬토네로스 관련자 64명도 사면되거나 기소 면제되었다. 다만 비텔라와 마세라를 포함한 군사통치 위원회 지도부와 몬토네로스의 지도자 마리오 피르메니치(Mario Firmenich)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Lewis 2002, 232.).<sup>14)</sup> 이들 역시

14) 피르메니치는 1974년 9월 아르헨티나 대기업 봉헤 이 보른(Bunge y Born)의 대주주 조안과 호르헤 보른의 납치를 비롯해 수 차례 테러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1984년 브라질에서 체포된 뒤 수감되었다. 몬토네로스는 1975년 6월 조안과 호르헤 보른의 석방을 대가로 미화 6,000만 달러의 몸값을 받은 바 있다. 한 연방검사에 따르면 이를

마지막 카라핀타다 반란이 수습된 뒤 1991년 1월 메넴이 단행한 두 번째 사면령을 통해 모두 석방되었다.<sup>15)</sup>

이런 민선정부의 과거청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선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청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함의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은 군부의 압력으로 인한 실패나 좌절이라기보다는 타협이 불가피한 정치·경제적 현실 속에서 독특하게 진행된 사례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치적 타협으로 귀결된 공식적인 청산을 ‘더러운 전쟁’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건넨 진지한 화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경제 사정의 악화 속에서 알폰신과 메넴 정부는 『눈까 마스크』에 집약된 결연한 의지나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철저한 진상규명의 요구와는 거리를 유지한 채 점차 기존의 ‘침묵협정’과 망각에 기대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V. 침묵과 망각의 협정에서 다시 심판으로

민선정부의 대(對) 군부 유화 정책과 가해자 사면을 용서와 화해를 통한 사회통합의 초석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컸다. 몇 차례의 법적, 정치적 수단을 통해 일단락된 아르헨티나의 공식적인 청산 작업은 피해자와 가해자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그 결과 1990년대 아르헨티나에선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되었다. 군부와 타협 속에서 정치적 해법이 모색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재정적 보상이 추진되는 동안 최대 강령의 실행, 즉 사법적 단죄를 통한 정의의 구현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포함해 이들의 은닉 자금은 약 9,000만 달러에 달했다(*Latin American Weekly Report* 26 July 1990, 3).

15) 메넴은 1976년 군사통치위원회에 의해 투옥된 바 있는 ‘더러운 전쟁’의 피해자로서, 이런 이력에 근거해 사면권을 적극 행사했다(이국운 1995, 292; Verbitsky 1996, 204).

페론의 이미지를 내걸고 집권에 성공한 메넬은 페론주의의 기초와는 거리가 먼 경제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보수적 조정’ 노선은 ‘더러운 전쟁’ 동안 군부가 지향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재편과 유사한 것이었다(이성형 1992, 130-131; Sidicaro 2002, 224-25).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 식상해했고 아울러 과거에 대한 기억이 상충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른바 ‘두 악마론’(teoría de los dos demonios)이었다.

이는 국가폭력과 좌파의 테러를 병치시키면서, 군부독재의 확립에 대한 책임의 절반을 좌파 무장 세력에게도 전가하는 논리였다(Cerruti 2001, 16; 셀비 2001, 25). 이에 따르면 좌파 게릴라 조직의 테러행위가 <아르헨티나 반공동맹> 같은 극우 세력의 폭력을 가중시켰고, 이런 폭력과 혼란이 ‘국가 재건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군사쿠데타를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군부가 자행한 폭력이 악(惡)이었다면, 그것은 좌파 무장세력의 테러라는 또 다른 악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필요악이었다는 논리이다. ‘두 악마론’은 알폰신 정부 시절 군부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만드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민주화 이행기 알폰신 정부의 입지는 그다지 굳건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위해선 좌파 게릴라와의 공동책임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물론 사회·정치적 갈등을 무장 투쟁의 방식으로 치환하고, 이를 성전(聖戰)으로 미화한 좌파 게릴라의 폭력행위는 1976년 3월 군부의 개입에 대해 대중이 동의를 표하는 그럴듯한 이유가 되었고, ‘더러운 전쟁’ 초기 무차별적인 국가폭력의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군부가 집권 후 극우 집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좌파 무장조직을 철저하게 일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악마론’은 과장된 논리일 공산이 크다. 다양한 분파에 비해 실제 좌파 게릴라의 수가 많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Osiel 1986, 172), 중요한 문제는 군부통치자들이 그토록 불온시한 인민혁명군(ERP, Ejército Revolucionario del Pueblo)이나 몬토네로스의 테러가 얼마나 아르헨티나의 기존 정

치·사회적 질서에 위협적이었는가 라는 점이다. 1978년에 이르러선 좌파 무장조직의 흔적을 찾기 힘들었다(Marchak 1999, 331). 이는 ‘두 악마’끼리의 대결에서 군부가 완벽하게 승리했기 때문인가? 연구자들은 처음부터 아예 맞상대라 할 수 없을 두 세력 사이에 “일방적인 토끼몰이”가 있었을 뿐 “어떤 전쟁도 없었다”고 결론지었다(Lewis 2002, 241-242). 아르헨티나의 좌파 게릴라 세력은 훈련과 장비가 형편없었고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으며 확고한 대중적 기반을 세우지 못했다. 한마디로 “베트콩과는 달랐다”(Pion-Berlin 1997, 145).<sup>16)</sup>

어쨌든 동일한 시대를 표현하는 두 용어, ‘더러운 전쟁’과 ‘국가 재건 과정’ 사이에 존재하는 큰 편차만큼이나 상충되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과거규명과 사회통합의 길은 순탄치 않아 보였다. 이런 난항의 가능성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꽤 일찍부터 정치적 사전정지 작업의 불가피성이 제기된 바 있다. 미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더러운 전쟁’이 한창이던 1978년 말 아르헨티나 사회민주당의 부대표 아우구스토 맥도넬(Augusto Conte MacDonell)은 비텔라와 비올라의 권력 기반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정치적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군부통치자들에게 뉘른베르크 식 재판이 없을 것임을 법적으로 보증하고 “국가 전복 세력에 대한 작전”을 수행한 군인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저명한 인권운동가 에밀리오 미요네(Emilio Mignone) 역시 군부의 병영복귀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사면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sup>17)</sup> 뿐만 아니라 군부 내에서도 ‘망각법’과 같은 사면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18)</sup> 이는 ‘망

16) 게릴라의 위협에 대한 군부의 과장을 수긍하더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양산한 통제 불가능한 국가폭력과 간헐적인 좌파 게릴라의 테러에 대해 동등한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인권침해의 책임 소재가 대체로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는 국제법적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Roht-Arriaza 1995, 285).

17)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재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이 회합을 통해 몇몇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 사이에서 정치적 사면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Political Parties Discussion Amnesty”(Dec. 29, 1978), <http://foia.state.gov/documents/Argentina/0000A8D0.pdf> 참조.

18) 군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던 한 장교는 “우리엔 사면과 일종의 망각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경험이 많은 정치인들 역시 공감하는 바이며, 군부가 정치무대에서 퇴장할 수 있는 선결조건임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Human Rights: A



각협정’(pacto del olvido)으로 대변되는 1970년대 후반 스페인의 과거 청산 방식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스페인에서는 1975년 독재자 프랑코가 사망한 뒤 구체제를 주도한 군부 및 보수 세력과 좌파 세력 사이에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져 흔히 ‘망각협정’이라 부르는 사면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내전 및 독재 시절 좌·우익 세력이 저지른 모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일대 사면조치가 단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범죄행위를 규명하거나 책임소재를 묻지 않은 채 덮어버림으로써 진지하게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는 회피한 것이었다(김원중 2005, 293-294).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선 이런 침묵과 망각의 협정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최근 들어 알폰신과 메넴 정부의 정치적 타협의 소산에 대해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적,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2003년 5월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취임 이후 “기소종결법”과 “강요에 따른 복종법”과 같은 처벌면제법(leyes de impunidad)과 메넴의 사면령을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활기를 띠었다. 결국 2003년 8월 아르헨티나 의회는 기존의 사면조치에 대한 폐기를 결의해 다시 한번 진상규명과 사법적 판결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의회의 결의가 법제화되기 위해선 대법원의 승인이 필수적인데, 2005년 4월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2004년 8월 대법원이 내린 유사한 판결을 통해 향후 결정에 대해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당시 대법원은 197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살해된 칠레의 장군 카를로스 프랏츠(Carlos Pratts)의 살해범 중 한 사람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반인륜 범죄 기소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천명한 바 있다.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판사 발타사르 가르손(Baltasar Garzón)의 수사활동은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상황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1996년부터 ‘더러운 전쟁’ 동안 실종된 스페인 시민권 소지자들의 행방을 추적해 온 가르손은 1999년 학살, 테러, 고문 혐의로 98명의 아르헨티나 군 장교들에게 국제 체포

---

Military View”(Sep. 11, 1979), <http://foia.state.gov/documents/Argentina/0000A9FB.pdf> 참조.

영장을 발부하고 2000년 ‘더러운 전쟁’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련범죄인 48명을 스페인 법정으로 인도할 것을 인터폴에 요청한 바 있다.<sup>19)</sup> 당시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도 데 라 루아 정부는 내정 간섭과 주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지만, 2000년 8월 인권유린 및 위조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된 전직 아르헨티나 군 장교 리카르도 카바요에 대해 멕시코의 대법원은 2003년 6월 스페인으로 인도할 것을 최종 판결하기도 했다.<sup>20)</sup> 한편 2005년 1월부터 가르손 판사는 범죄행위의 발생 장소에 상관없이 스페인 법원에서 반인륜 범죄를 심리할 수 있게 된 새로운 법에 따라 전직 아르헨티나 해군 대위 아돌포 실링고(Adolfo Scilingo)의 ‘죽음의 비행’<sup>21)</sup>에 관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sup>22)</sup>

또한 2001년 3월 초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의 판사 가브리엘 카바요는 기존의 사면법이 인권보호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001년 11월에는 군 장교들의 인권유린 혐의에 대해 처벌면제를 상정한 사면법의 철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실종자 자녀들의 불법 탈취가 기존 사면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특수한 범죄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2002년 말부터 비델라와 마세라는 가택 연금에 처해졌다.<sup>23)</sup> 기존의 사면법

19) 이 중 생존자 46명의 명단은 *El País*(27 de julio de 2003, 5) 참조.

20) 이 결정은 아르헨티나에선 기존의 사면법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외국에서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인권 단체들은 이를 “국제사법의 진정한 승리”라고 환영했다(*BBC News* 11 June 2003, <http://news.bbc.co.uk/go/pr/fr/-/1/hi/world/americas/2980514.stm>).

21) Verbitsky(1996, 204) 참조. 실링고는 악명 높은 해군기술학교의 수용소에서 근무한 해군 장교로서 1976-78년 동안 살해당했거나 의식을 잃은 수감자들을 한 번에 15-20명 씩 비행기에 태워 바다에 던져 버리는 끔찍한 업무를 맡았다고 고백했다. 이런 식으로 그가 처리한 이들의 수는 줄잡아 1,750여 명에 이르렀다(*The Economist* March 25 1995, 46).

22) 실링고는 스페인 법정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뒤 1997년 10월 학살과 테러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고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 뒤 가르손 판사는 실링고에게 스페인에 머물면서 매주 법정에서 보고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2005년 3월 현재 새로운 재판에 회부된 실링고는 당시 증언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스페인 검찰은 30건의 대량학살과 30건의 살인, 93건의 상해 및 225건의 테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게 징역 9,138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BBC News* 18 January, 2005, <http://news.bbc.co.uk/go/pr/fr/-/1/hi/world/americas/4185913.stm>; 7 March, 2005, <http://news.bbc.co.uk/1/hi/world/americas/4326913.stm>

23) 아르헨티나의 현행법상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징역 대신 가택연금의 형벌이 부과

이 유효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법적 심판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 역시 획기적인 것이었다. 마침내 2004년 3월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은 영·유아 탈취 및 강제입양 혐의로 지방 경찰청장 에체콜라츠(Miguel Etchecolatz)와 경찰청 소속 의사인 베르헤스(Jorge Berges)에게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법원이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 VI. 맺는 말

이제까지 민주화 이행 이후 아르헨티나의 민선정부가 주도한 과거 청산 작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조사 국가위원회를 구성해 세계적인 이목을 끈 공식 보고서 『눈까 마스크』를 제출했다는 점, 둘째, 인권탄압과 실종 사례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조사 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후속 재판이 이어졌지만, 군부 강경파의 반발로 좌초되었고 끝내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 셋째, 사회 전반의 관심이 약해진 가운데서도 <오월광장 어머니회>를 비롯한 피해자 단체가 실종자 문제의 진상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 넷째, 좌파성향의 집권 세력 주도로 최근 침묵과 망각의 협정을 철회하고 ‘더러운 전쟁’ 시절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 입법 및 사법적 심판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눈까 마스크』로 대변되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사법적 청산 과정은 군부의 견제, 특히 일방적인 형벌을 우려한 일부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더러운 전쟁’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고, 점차 기소범위 축소와 신속한 재판 종결, 포괄적인 사면을 통한 정치적 타협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으며 피해자들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과거규명 의지가 표출되면서 ‘더러운 전쟁’의 유산에 대한 청산 논의가 재개되었다. 말하자면 『눈까 마스크』로 집약되는 결연한 심판의 자세와 청산 문제를 가급적 대면하지 않으려는 침묵협정 사이 어딘가에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듯 하다.

흔히 과거청산 과정을 ‘성공과 실패’ 양단간(兩端間)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이런 평가가 얼마나 일면적일 수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양자를 구분하는 엄밀한 기준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진 않지만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단죄의 정도를 기준으로 과거청산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나눌 수 있다면, 가해자들의 반발에 밀려 정치적 타협에 이르고 만 아르헨티나 민선정부의 경우는 결코 성공한 사례로 볼 순 없을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과거청산이 도덕적, 규범적 당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정치의 역학관계와 맞물린 일종의 정책적 문제라는 점에 유념한다면,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평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공식적인 청산 작업은 많은 한계를 드러냈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성과에 주목하지 않은 채 그저 군부의 압력에 민선정부가 일방적으로 굴복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과거청산 정책이 일종의 정치적 행위일 수 있는 만큼 정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과거청산이란 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말비나스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군부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위원회가 공식적인 조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 본보기를 제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은폐, 축소, 왜곡된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과 책임의 규명을 소홀히 한 채 신속한 정치적 타협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심화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공식적인 청산 뒤에도 지속되는 논란과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과거규명 문제의 재론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과거청산이란 일회적인 종결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책임규명 및 처벌을 둘러싸고 언제든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미완의 과정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오랜 세월 잠복해 있던 미해결 문제들이 특정한 상황을 계기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것처럼 과거청산은 언제나 진행형일 수 있으며 그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 문제는 군부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우려가 거의 사라진 2003년 좌파성향의 키르츠네르가 집권한 뒤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소강상태에 있던 청산 논의가 재개되었고 사법적 청산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유보된 진상규명의 때늦은 추진과 재론을 정치적 접근으로 치부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과거사 접근은 또 다른 갈등과 보복을 초래할 공산이 크며, 자칫 당대 현실을 도외시한 도덕적 당위성의 강조나 흑백논리의 반복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과거청산 작업을 특정 세력의 정치적 공세라고 한다면, 그것을 회피하려 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 처벌의 수위를 조절하려는 시도 역시 정치적인 행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이란 표현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필요는 없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내면적 반성과 진지한 역사인식은 정치적 진공이 아니라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는 현실과의 대면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과거사를 감추거나 미화하는 것, 또는 깎아 내리는 것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

더욱이 ‘더러운 전쟁’의 수행자를 심판대에 세우고, 고문과 학살의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일은 과거청산의 시발점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 바람직한 과거청산을 위해선 불행한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끈질긴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사법적, 정치적 방식을 통해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못지 않게 중요하며 더 오랜 세월이 걸릴지 모르는 과거성찰, 예컨대 피해자의 상흔에 대한 애도와 치유의 노력, 비극적인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반성의 의미, 그리고 사회 전체의 역사인식과 가치의 문제에 관해서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시야를 넓혀 ‘더러운 전쟁’을 등장시킨 지정학적 요소, 달리 말해 정치·군사적 배경으로서 미국이 주도한 공식적, 비공식적 냉전정책과 그 영향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반인륜적 범죄를 양산한 반공 군부정권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지원하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사실이 최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곳에서 “콘도르(condor) 작전”이란 이름으로 추진된 비밀공작과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의 관련성, 그리고 미국 정부나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Argentine case of confronting the tragic past of the Dirty War from 1976 to 1983, during which period the military junta completely dominated political processes and carried out repressive politics of anti-subversion in an unprecedented manner. Thus the military regime left indelible trauma in Argentines' mind. At least 9,000 people disappeared according to the official source and certain human rights groups claim as many as 30,000 may have been assassinated during the period. This article pays special attention to civilian government-sponsored political and judicial practice regarding the inhumane crimes committed by the military junta. It also explores how the Alfonsín and Menem governments attempted to restrain military influence which enjoyed striking levels of power and privilege even after the transition to democracy.

The features of Argentine confrontation of the Dirty Wa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after the Dirty War, the Alfonsín government established the National Commission of the Disappeared (CONADEP) that would finally submit a large volume of official report

titled *Nunca Más*(Never More) on the terrible state terror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dictatorship. Second, although the subsequent judicial procedure tried to punish perpetrators, the human rights trials provoked military rebellions by *carapintadas* and finally led to political compromises through a series of laws of pardon(*leyes de perdón*) and presidential pardons. Third, in overall atmosphere of pact of silence and oblivion, there had been indefatigable and intransigent challenges by victims' family insisting on elucidating what really happens to the numerous disappeared.

This article finds that civilian governments in post-authoritarian Argentina had managed to make progress in challenging military prerogatives. However, the results were not positive in human rights issue. Facing with military repulsion, civilians had to negotiate the scope of indictment and degree of punishment with the military perpetrators and even accept military impunity. In doing so, the Argentine process of confronting the tragic nearly ended in political compromises by closing the judicial process, rather than pursuing reconciliation. However, recently the Néstor Kirchner administration opened up a new chapter of Argentine confrontation of the tragic past by supporting legislative activities to repeal *ley de impunidad* and groping for a new possibility to elucidate the issue of the disappeared and put the perpetrators on trial.

In sum, confronting the past in Argentina indicates that it is an unfinished process which often entails acute conflicts and controversies in a given society surrounding the important issues such as victims and perpetrators, and accountability and punishment. It should be noted that confronting the past cannot be accomplished in a single round but rather should be regarded as a continual and persistent process that deals with new questions over time.

Key Words: Argentina, Confronting the Past, Dirty War, *Nunca Más*, Pact of Silence / 아르헨티나, 과거청산, 더러운 전쟁, nunca más, 침묵협정

논문투고일자: 2005. 04. 20

심사완료일자: 2005. 05. 02

게재확정일자: 2005. 05. 20



## 참고문헌

### 1. 1차 자료(정부 문서, 신문 및 방송 기사)

The U.S. Department of State,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State Argentina Declassification Project(1975-1984) 총 4,677건(件)의 문서

<http://foia.state.gov/SearchColls/CollsSearch.asp> (검색페이지)

*Informe de la 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 (1984), *Nunca Más*, Buenos Aires: Editorial Universidad de Buenos Aires(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1988], 『눈가 마스크: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의 실상』, [송기도 역], 서당).

*Clarín*, 1987-1989, Buenos Aire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s, Latin America, <http://www.gwu.edu/~nsarchiv/NSAEBB/#Latin%20America>

- State Department Opens Files on Argentina's Dirty War(1976-1984) <http://www.gwu.edu/~nsarchiv/NSAEBB/NSAEBB73/index.htm>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1987-1991, London: Latin American Newsletters.

*BBC News*, World, Americas, 2000-2005, <http://news.bbc.co.uk/1/hi/world/americas>

### 2. 연구서 및 논문

김원중(2005), 「‘망각협정’과 스페인의 과거청산」, *역사학보*, No. 185, pp. 277-305.

송기도(2004), 「알폰신 대통령의 군부 청산과 민주화」, *기억과 전망*, No. 6, pp. 8-23.

이국운(1995), 「아르헨티나 인권재판의 전개과정」, *법과 사회*, No. 12, pp. 282-302.

이성형(1992), 「민선정부하의 경제정책: 알폰신 정부의 아우스트랄

- 계획에서 메넴 정부의 경제개혁에 이르기까지」, 지역연구, Vol. 1, No. 2, pp. 95-139.
- 헨리 셸비(2001), 「아르헨티나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억」, 민주주의와 인권, Vol. 1, No. 2, pp. 3-33.
- Ageitos, Stella Maris(2002), *Historia de la impunidad: De las actas de Videla a los indultos de Menem*, Buenos Aires: Adriana Hidalgo Editora.
- Barahona de Brito, Alexandra(2001), “Truth, Justice, Memory, and Democratization in the Southern Cone”, in Paloma Aguilar et al.(eds.), *The Politics of Memory: Transitional Justice in Democratizing Societie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19-160.
- Cerruti, Gabriela(2001), “La historia de la memoria”, *Puentes*, Vol. 1, No. 3, pp. 14-25.
- Corradi, Juan E.(1983), “The Mode of Destruction: Terror in Argentina”, *Telos*, No. 54, pp. 61-76.
- Fisher, Jo(1989), *Mothers of the Disappeared*, Boston: South End Press.
- Gilly, Adolfo(1990), “La Anomalía Argentina(Estado, Corporaciones y Trabajadores)”, in Pablo González Casanova(ed.), *El Estado en América Latina: teoría y práctica*, México, D.F.: Siglo Veintiuno Editores, pp. 187-213.
- Graham-Yooll, Andrew(1984), *The Press in Argentina, 1973-1978*, London: Writers & Scholars Educational Trust.
- Hayner, Priscilla B.(2001), *Unspeakable Truths: Confronting State Terror and Atrocity*, New York: Routledge.
- Hernández, Pablo(1989), *Conversaciones con el Teniente Coronel Aldo Rico de Malvinas a la Operación Dignidad*, Buenos Aires: Editorial Fortaleza.
- Hodges, Donald C.(1991), *Argentina's “Dirty War”: An Intellectual Biograph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Huser, Herbert C.(2002), *Argentina Civil-Military Relations: From Alfonsín to Menem*,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 Lewis, Paul H.(2002), *Guerrillas and Generals: The “Dirty War” in Argentina*, Westport and London: Praeger.
- Loveman, Brian & Thomas M. Davies, Jr.(eds.)(1997), *The Politics of Antipolitics: The Military in Latin America*,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Inc.
- Marchak, Patricia(1999), *God's Assassins: State Terrorism in Argentina in the 1970s*,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Norden, Deborah L.(1996), *Military Rebellion in Argentina: Between Coups and Consolid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O'Donnell, Guillermo et al.(eds.)(1986), *Development, Democracy, and the Art of Trespassing: Essays in Honor of Albert O. Hirschma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
- Osiel, Mark J.(1986), “The Making of Human Rights Policy in Argentina: the Impact of Ideas and Interests on Legal Conflict”,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8, No. 1, pp. 135-180.
- \_\_\_\_\_ (2001), “Constructing Subversion in Argentina's Dirty War”, *Representations*, No. 75, pp. 119-158.
- Payne, Leigh A.(2000), *Uncivil Movements: The Armed Right Wing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edroncini, Alberto(2001), “Existe un pacto de silencio...,” *Milenio*, No. 5, pp. 100-105.
- Pion-Berlin, David(1985), “The Fall of Military Rule in Argentina:

- 1976-1983”,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27, No. 2, pp. 55-76.
- \_\_\_\_\_ (1997), *Through Corridors of Power: Institutions and Civil-Military Relations in Argentina*,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Roht-Arriaza, Naomi(ed.)(1995), *Impunity and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mero, Luis Alberto(2002), *A History of Argentina in the Twentieth Century*, (trans. by James P. Brennan),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Saavedra, Emiliana López(1984), *Testigos del “proceso” militar I(1976-1983)*, Buenos Aires: Centro Editor de América Latina.
- Sain, Marcelo Fabián(1994), *Los levantamientos Capapintada, 1987-1991*, Vols. 1-2, Buenos Aires: Centro Editor de América Latina.
- Sidicaro, Ricardo(2002), *Los Tres Peronismos: Estado y poder económico, 1946-55/1973-76/1989-99*, Buenos Aires: Siglo Veintiuno Editores.
- The Americas Watch Committee(1987), *Truth and Partial Justice in Argentina*, Washington DC: The Americas Watch Committee.
- Verbitsky, Horacio(1996), *The Flight: Confessions of an Argentine Dirty Warrior*, (trans. Esther Allen), New York: The New Press.